민주 전대 룰 싸고 486-575 대립하나

〈4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50대·70년대 학번·50년대 출생〉

486, 대표-최고위원 분리 단일지도체제 선호… 세력화 나서

575, 집단지도체제 도입 안되면 후보 단일화 통해 세력 교체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진영과 575(50대, 70년대 학번, 50년대 출생)진영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입을 노리는 486 진영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반면 575 진영에서는 득표 순서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 함께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의 배경에는 냉혹한 정치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일단 차기 전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된다면 당내 486 주자들의 지도부 진입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박주선, 김효석, 추미애 등 당내외 기반이 확실한 당권 주자들이 대거 경선에 나선다면 현실적으로 486 주자들에 돌아갈 최고위원 자리는 1~2석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575 주자들은 대표에 선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6위 이내에 진입한다면 대표와 비슷한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정치적 타격도 적다.

하지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단일 지도체제가 유지된다면 575 주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반면 486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당장 575 주자들은 당권 도전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상 추락 등으로 추후 행보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최고위원 도전에 나설 수도 없다.

하지만 486 주자들은 당권 및 대권 주자들의 최고위원 출마 차단을 통해 지도부 진입이 용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단일 지도체제가 유지된다면 최소 2~3명 정도의 486 주자들이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재성, 조정식, 강기정, 백원우 의원과 임종석,우상호, 윤호중, 오영식 전 의원 등 486 원내외 인사들은 지난 23일 모임을 갖고 세력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자체적인 교통정리를 통해 486 주자들의 지도부 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486 주자들의 세력화에 대한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입으로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행동은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575 주자군은 지도체제 개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주류 연대를 모색하며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세력 압박에 나서고 있다. 575 주자군은 막판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주류 세력 교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선 및 총선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 성향의 486 주자군과 비주류 성향의 575 주자군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종시 수정안 논의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민주 재보선 '풍요 속 빈곤'

외부 영입 잇단 불발 공천 골머리

광주 남구 등 무공천 요구 고심도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7·28 재·보선 승리를 겨냥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부영입 및 차출 카드가 잇따라 불발, 적임자 물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양보하라"는 다른 야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은평을의 공천이 가장 큰 문제다. 한나라당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MB대 반(反)MB 구도'라는 상징성이 커진 곳이지만 7~8명의 후보 난립에도 불구, 대항마 물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신경민 MBC 기자 등의 영입 논의가 있었지만 본인들의 고사로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도 정세균 대표가 직접 나서 충주 출신의 486인사인 이인영 전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이 전 의원의 고사로 차출론이 사실상 물건너갔고, 지도부가 태백·영월·평창·정선 후보로 공을 들였던 엄기영 전 MBC 사장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텃밭인 광주 남구에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몰려드는 등 강세지역의 과열 조짐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후보 가뭄이 빚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도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이 은평을과 광주 남구 등 일부 지역의 '무(無)공천'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지도부 일각에선 "반드시 민주당 후보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내부 주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29일 "여러 가지로 사정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30일 공심위에서 전략지역과 경선지역을 결정하는 등 공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권 도전 박주선 '광폭 리더십' 주목

정세균·정동영 접촉 "쇄신만이 살길" 조정자역 나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선 최고위원이 '쇄신'을 기치로 당내 주류와 비주류 세력의 조정자 역할에 나서는 등 '광폭 리더십'을 과시, 주목받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잇달아 만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지도체제 전환과 당권·대권 분리 방안 등을 제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 선출될 대표의 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번 주 내에 손학규 전 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차기 전당대회 룰과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 핵심 관계자는"다음달 4일 이전에 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나름대로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최대 주주로 꼽히는'빅3'와의 연쇄 접촉에 나섬에 따라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측의 합의점 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 최고위원이 당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주류와 비주류 세력은 물론 대권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이 비주류 연합체 성격인 쇄신연대에 참여함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이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지적이다.

이는 박 최고위원의 행보가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차기 전당대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 그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당을 살리고 발전시키자는 축제적 성격의 행사"라며 "박 의원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당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28 재보선 광주 남구 등 8곳 확정

중앙선관위, 내달 13~14일 후보자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28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이 국회의원 재선거 1곳, 보궐선거 7곳 등 모두 8곳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확정한 재·보선 지역은 ▲서울 은평을(재선거)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이상 보궐선거)이다.

후보자등록은 내달 13~14일 해당 지역 선관위별로 실시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음달 9~13일 주민등록지 구·시·군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서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아울러 선거일 전 6일인 7월22일부터는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